

사회학 교육 개선방향에 대한 몇 가지 제안

강정구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사회학을 비롯해서 어떤 학문이든 학문 밖의 세계인 사회와 시대의 흐름을 외면하고 고고한 상아탑 속에 유아독존적 존재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 남산골 샌님식으로 추구된 학문은 궁극적으로 박물관의 골동품 신세로 전락하기 마련이다. 특히 사회학은 그것이 존립하는 곳의 토양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그 대지 위의 공기로 숨을 들이마시면서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학문이 되어야 한다. 곧, 사회학은 사회변동을 설명하고, 변동방향을 제시하며 또 실천하는 데 있다.

또 사회학은 그 정체성을 사회과학의 기초학문·종합학문·포괄학문적 성격에서 찾아야 한다. 그래서 좁은 영역을 깊게 파고 들어가 분업화된 구도 아래 자기가 맡은 분야의 영역전문화를 추구하는 행정학·경영학 등과는 달리 풍부한 상상력과 창의력, 비판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연구 및 분석대상의 광역화, 사물에 대한

총체적 이해와 종합화 등을 통하여 다품종을 생산해 내는 ‘장인 생산(craft production)’적 학문이다. 이러한 사회학의 특성은 후기 포디움의 유연생산체계라는 다품종소량생산체제,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중시되는 정보·통신사회, 전문화보다는 광역화를 요구하는 학부제 및 복수전공제를 골간으로 하는 대학개혁의 줄거리 등과 ‘선택적 친화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사회학에 대한 이러한 인식 아래 앞으로 사회학 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관하여, 첫째는 학문외적 조건을 21세기의 세계사적·민족사적 흐름과 이에 따른 교육개혁의 방향이라는 영역으로 나누어 약술하겠다. 둘째는 한국 사회학 및 사회학 교육의 현주소에 대해 몇 가지에 한정하여 비판하고 이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 셋째는 현재의 사회학 교육과 사회학 일반에서 잘못 조성되고 재생산된 신비화 현상을 들추어내고 탈신비화 방향에 관해 논의하겠다.

1. 21세기의 특성화

5년 이후면 펼쳐질 21세기에 대한 그림을 조야하게 그리도록 하겠다. 2차대전 이후 알타 체제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냉전하의 세계질서가 사회주의 체제와 소련이 몰락함으로써 붕괴되고, 과학기술혁명의 획기적 발전이 이룩됨으로써 전환기적 시대에 접어들었다. 민족사적으로는 50년이 넘는 분단시대를 마무리하고 통일시대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1) 정보통신사회화, 지구촌화, 다품종소량 생산의 유연생산체제화

1970년대 극소전자혁명을 계기로 선진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력의 비약적 발전이 이루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특히 정보산업과 통신산업이 급팽창하면서 정보고속도로의 구축이 머지 않아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 발달을 통해 이루어진 고속도로에는 동서냉전이 해소되어 진영간의 장벽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옛날의 자본주의권은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옛 사회주의권도 고속도로에 편승할 수 있고 또 승차할 것을 강요받고 있다. 또한 다국적 자본이 주도하는 지구촌화로 이 정보고속도로는 지구촌 구석구석의 안방까지 침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정보사회화 및 지구촌화는 우리의 기존 일상생활의 모습을 엄청나게 바꿔 놓을 것이다. 시간과 거리의 개념이 훨씬 단축되고, 국경의 개념이 회색되어 지구촌에 사는 지구촌인이 될 것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사회현상 전반이 어떤 영향을 받으며, 우리가 살 자리를 어떻게 개척하고, 보편적 지구촌 사람이면서 특수한 한국인의 위상은 무엇인지 등 새로운 조건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생산체제도 기존의 포디즘의 소품종대

량생산에서 다품종소량생산 체제로 바뀌어지면서 창의력과 독특성이 생산의 주요 둘째로 차지하게 된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생산과 경영의 의사결정구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참여경제체제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지 않고는 생산성의 향상을 기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창조력과 상상력을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개성화 교육으로 육성하는 교육개혁이 요구된다.

2) 통일시대와 지방화시대의 개막

1990년대부터 우리는 통일시대의 서막을 열었다. 1987년 민주항쟁 이후 활성화된 민족·민주운동과 탈냉전 및 새로운 세계질서라는 외적 조건이 서로 결합하여 이제 분단 50년을 우리 스스로 마감할 통일시대를 맞았다. 앞으로 20~30년 동안 남과 북은 그 정권의 주체적 의지와 상관 없이 통일기반 조성이라는 민족사적 과제를 실현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 학문계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제까지 지나치게 비대한 중앙권력에 짓눌려 지방자치나 지방의 특성화가 시도되지 않았으나, 이제 지방자치제의 수립을 계기로 지역적 자율성과 특화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3) 교육개혁의 강풍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가 교육개혁안을 내놓으면서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판짜기가 시작되었다. 이 가운데 특히 대학교육에서는 기존의 학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부교육을 학부 중심으로 전폭적 개편을 시도하고 있다. 이 학부제와 복수전공제의 골간은 학부에서까지 전공 심화를 추구하기보다 이러한 심화를 통한 전문인 양성은 대학원 둘째로 돌리고, 광역화를 통하여 다영역에 대한 기초를 함양시켜서 다기능인과 다품종화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자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사회학과도 대부분 학과 중심이 아니라 사회과학부의 한 전공으로서 위상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사회학 교육도 학부제에 걸맞게 전폭적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

2. 사회학 교육에 대한 몇 가지 제안

긍정적이지 못하다고 여겨지는 남한 사회학 교육과 사회학의 현주소를 비판적 관점에서 지적하면서 나름대로 개선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첫째, 이미 전태국 교수가 『대학교육』지 45호(1990. 5월호)에서 적절히 지적했듯이 남한 사회학과 사회학 교육은 이중적 식민구조 아래 놓여 있다. 하나는 전반적인 교과운영과 사회학 일반에서 미국 사회학에 대한 예속이라는 의미에서 외부식민성이다. 다른 하나는 지방대학 사회학 교육이 서울 소재의 명문대학의 것들을 답습하는 의미에서 내부식민성이다.

다행스럽게도 80년대 변혁 진통기를 겪으면서 이러한 이중식민성을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신진교수들에 의해 활발히 일어났고 또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성찰적인 움직임이 90년대에는 주춤히 일어나면서 우려를 자아내게 하였다. 하지만 학부제 시행을 계기로 교과과정이나 교수방법 등의 전면적 개편이 요구되는 현실은 어느 정도 이중식민성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외적 탈식민화의 방향은 과감히 미국 사회학의 아류적 속성을 벗어버리고 우리식 사회학과 탈미국식 사회학 교육이라고 여겨진다. 이는 과거 반세기 가까이 구축되어 왔던 인적·물적 구조화에 대한 청산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더 나아가 미국 해계모니 아래의 세계질서가 지속되는 상황과 세계화의 파고가 거센 이 시점에서 완벽한 탈미

국 사회학은 실현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비록 완벽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80년대의 탈식민화 움직임을 지속시켜 어느 정도의 탈식민화를 이루는 것은 긴요하고 가능한 일이다.

앞에서 우리는 21세기의 시대 규정을 통일시대와 정보·통신사회 및 지구촌화라고 자리매김하였다. 이 시대규정과 걸맞은 교과목은 남·북한비교론, 북한사회론, 민족사회학, 민족통일론, 정보사회론, 비교사회론, 환경사회학, 영상사회학 등을 확충하고, 미국 표준 사회학의 전통을 이어받은 기존의 이론 및 조사방법에 치중된 표준과목들을 대폭 조정하며, 전공필수 영역에서 해제하는 것이다. 이제 전공필수 영역의 설정은 전문화보다는 광역화를 요구하는 학부제에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교과목 조정과 전공필수 과목 해제와 더불어 교수총원 과정에서 미국 학위 선호도, 해외유학에서 미국으로의 편중성, 학술교류에서 대미 편중성 등에 대한 대응이 요구된다.

내적 탈식민화의 경우는 서울대학교의 비대화로 인해 전 학문분야에서 중추적 기능의 중앙집중화라는 혼돈구도를 바꾸는 작업이 요구되나, 이는 좁은 사회학 영역 밖의 문제이기에 더 이상 세론하지는 않겠다. 다른 한편, 그런 대로 기대할 수 있는 현상은 지방화와 지방자치화의 진척이다. 이제 대학은 지방화시대를 맞아 그 지역과의 유기적 결합을 요구받고 있다. 이미 지방자치화의 실시로 지방공무원의 경우, 그 지역 출신에 자격을 국한한다든지, 지역 산업체 인력을 동일 지역 출신으로 충원한다든지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따라서 서울에서 지방대학에 유학온 학생의 경우, 그 지역과의 연고부재로 유기적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서울 명문의 교과과정을 기계적으로 모방하는 것은 졸업후 학생들이 그 지역에 유기적 공동체 일원이 되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교과과정의 지방화, 교수총원

의 지방화, 학생의 지방화 등이 요구된다. 이 경우 내적 식민화는 상당히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과목과 교수방법의 획일화이다. 대학 원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 간에, 서울 소재 대학과 비서울 소재 대학 간에, 을산이나 창원 등 공업지역을 배경으로 한 대학과 호남평야 등 농업지역을 배경으로 한 대학 간에, 여자대학과 남자대학 간에, 학과 여학생 비율이 2/3에 육박하는 대학과 1/4도 되지 않는 대학 간에, 산업화 초기인 70년대와 다품종소량생산체제로 이행하고 있는 90년대 사이 등의 차별성이 교과목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 곳이나 저 곳이나, 그 때나 지금이나,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에 '무관'하게 '천편일률적인 표준 교과목'을 사수하는 모습으로 사회변동의 설명과 이해 및 실천을 지향하는 사회학으로 발전하기는 힘들다. 교수방법 또한 여러 가지 차별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고전적 교수방법인 강의식이 암도적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지향 방향은 교과목의 탈획일화와 교수방법의 탈강의식화이다. 이는 지방화에 따른 각 대학의 특성화 및 지역화, 교수충원 방향의 개선, 교수방식 다양화에 대한 집단적 연구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지방화시대를 맞아 그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교과목의 개설이 객관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므로 사회학 교과과정의 지방화를 지향하면 획일적인 표준 교과과정과 표준 사회학에서 벗어나 분화나 다양화가 진척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 대학의 사회학과 교수충원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제까지는 중복전공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 세부영역의 철저한 분업화와 교과목의 전담화를 꾀했다. 그러나 이제 학부제에서 교과목은 전공영역의 심화보다는 전공 영역의 광역화가 요구되기 때문에, 비슷한 전공자를 모아 교습의 전문화보다는 연구업적의

전문화를 꾀하는 교수충원구조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어느 대학 사회학과는 노동사회학으로 특화되었다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말한다.

또 교수방법의 다양화, 특성화, 차별화가 교수 개개인의 뜻으로 방치될 때는 교수방법에서 개선의 여지가 없다. 학회나 학과 차원에서 이에 대한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연구를 통해 대안을 다양하게 제시하는 집합적 노력이 진요하다. 이러한 개선의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비록 시간이 걸릴지라도 탈획일화와 탈강의식화가 진척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교수 개개인의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보기를 듣다면 사회문제론 같은 강좌는 교수가 강의계획서를 일방적으로 짜기보다는 학생들이 소집단을 짜서 각기 문제영역을 설정하고 각 집단이 그 영역의 교수가 되어 발제를 하며, 다른 수강 학생들에게 미리 과제물을 부과하고 평가까지 하는 방법 등이다. 또 수강학생이 많은 교양과목의 경우, 일주일에 한 시간 정도는 수강학과별로 집단 발표를 시킬 수도 있다. 필자의 경우 '북한의 정치와 사회'라는 강좌에 이 방법을 도입하였더니 어떤 학과는 통일문제에 대한 발표를 하는데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부터 합창을 먼저 하고 시작하거나, '분단 역사기행'의 비디오를 먼저 상영하는 등 아주 다양하고 독창적으로 발표를 하여 흥미롭고, 현장감 있으며, 가슴에 와닿는 수업이 되었다.

셋째, 사회학 교과목은 60년대부터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역사사회학, 정치사회학, 도시사회학, 가족사회학 등 영역별로 나누어져 이제 까지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광역화를 요구하는 유연생산체계, 학부제 등의 외적 조건에서는 주제나 문제영역 중심으로 교과목 조정이 필요하다. 물론 영역중심의 과목을 전혀 배제할 수 없겠지만, 이제는 각 학교별로 비교우위가 있는 전략적 대주제를 선정하여 그 부분

에 대해서는 문제중심으로 강좌를 개설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 보기를 듣다면 ‘21세기 농민혁명’,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한국 경제 개발 정책과 도시화’ 등이다. 또 절충적인 방법으로는 학기 또는 1년 단위로 주제를 바꾸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곧, 96년도에는 ‘역사 사회학 : 21세기 농민혁명’, 97학년도에는 ‘역사사회학 :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등으로 순환식의 강좌를 개설하는 것이다.

넷째, 비판지향적 사회학의 강화가 필요하다. 비판성이란 사회과학의 기초과학이고 종합과학이라는 사회학의 정체성에서 전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주류사회학의 경우, 이러한 비판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것 같다. 낮은 곳을 향하기보다는 높은 곳을 향하는 사회학이라든지 기존의 패러다임에 얹매여 새로운 접근에 대해 배외성으로 학문의 개방성을 저하시키는 등 전반적으로 비판성 거부 경향을 띤다.

낮은 곳에 있는 사회현상은 골드너가 잘 지적했듯이 사회의 다른 성원으로부터 일반적으로 무시되거나 잘못 제시되어 온 사회적 실재이고, 고통받는 인간의 삶이며, 이 고통의 대부분은 회피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학자들의 긴급한 연구가 요청된다고 말했다.

꼭 낮은 곳에 임하는 것이 비판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 30년 동안 군부독재와 독점자본의 전횡 아래 분단이라는 장막 속에 낮은 곳의 많은 민초들이 갈හ 삶과 고통의 전담을 강요당해 왔다. 이러한 낮은 곳의 삶과 사회현상을 연구대상화하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비판성을 담보하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다섯째, 사회학의 고전은 서양인의 고전뿐인가? 맙스, 베버, 뒤르켐 등으로 집약되는 고전 사회학 문헌목록도 이제 재검토되어야 한다. 우리와 동양의 고전으로서 사회학적 바탕을 둔 문헌을 개발하고 교재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정치사회학에서 맹자, 가족사회학에서 소학, 동동선습, 실학 문헌 등도 활용한 사회학 고전화

가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 지구촌화는 주로 서양의 것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듣구면서 세계인류사의 보편성과 접목시키는 데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학 고전의 ‘우리화’는 학계에서 집단적으로 추구해야 할 과제이다.

이제까지 대표적인 것을 간추려서 현주소를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나름대로 개선안을 비치 제작이나마 제시하였다. 본격적인 개선방안은 보다 엄밀한 분석과 검토가 요구되는 것이므로 여기에서의 제안은 어디까지나 단상적인 것에 불과하다.

3. 잘못된 신화

우리 사회학계는 언제부터인가 잘못되고 사악한 신비화에 빠져 있다. 마치 틸리가 뒤르켐을 비롯한 19세기 사회과학자들이 잘못 만들어온 신비화에 그 후학들이 빠져 사회현상의 이해나 설명에서 엄청난 해악을 끼쳤다고 했듯이, 우리 사회학계도 그러한 잘못된 신비화에 많은 사회학도들이 빠져 있는 것 같다. 사회학과 사회학 교육도 우선 이들 신비화에 대한 탈신비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 1) 사회과학 방법론과 조사방법의 전도현상
1950~60년대 미국 사회학에서 과학적인 것의 의미는 계량화와 동의어로 해석되었다. 이 덕분에 계량화 방법을 다루는 조사방법이라는 교과목은 방법론의 제왕으로 군림하게 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의적 식민성에 매몰되었던 한국 사회학도 조사방법이라는 교과목이 거의 모든 사회학과에 개설되고 또 대부분 전공필수화 했다. 이 계열에 속하는 과목으로 사회통계, 조사방법, 조사방법실습이나 연습 등으로 3~4 개 과목이 대부분 사회학과에서 개설되고 있다.

그러면서 ‘방법론은 곧 조사방법’이라는 잘못된 신비화가 조성되었다. 지식 생산의 원칙과 조건들에 관한 인식론이나 논증의 절차와 형식을 이야기하는 방법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방법론이라는 모집합이 주로 계량적인 방법을 통해서 논증을 뒷받침하는 부분집합에 불과한 조사방법에 암도당해 버렸다. 그래서 마치 방법론이나 방법은 오직 조사방법으로 통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전도현상이 심화되어 신비화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전도현상과 더불어 일부에서는 조사방법 신비주의로 몰입하는 자기도취에 빠지기도 한다. 가끔씩 요란스럽게 나열된 수학공식과 새로운 기법의 소개로 발제시간의 대부분을 할애하고는 정작 긴요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사이의 관계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은 뒷전으로 미루는 모습들을 본다. 거기에는 우리말이 아니라 영어나 외국어 투성이로 발표를 걸들이나.”¹⁾ 이렇게 함으로써 무언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학문신비주의를 연출한다.

우리 사회학이 미국 사회학의 외적 식민성에서 탈피하여 우리식 사회학이 되기 위해서는 이 사악한 신비화를 허물어뜨리는 탈신비화 작업이 진요하게 요구된다. 사회과학 방법론 강좌와 조사방법 강좌가 서로 접목할 수 있도록 조사방법 강좌는 최소한 1~2주 정도는 모집합인 인식론이나 방법론 일반에 할애하여 모집합과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해주어 근거 없는 균형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방법론 강의

또한 부분집합인 조사방법에 대한 올바른 위상을 설정해주어 일부 학생들이 조사방법에 대한 배타주의적 선입견에 빠져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이론화를 외면한 이론과의 신격화

사회학회 차원에서 지속적 과제로 설정된 것이 한국의 사회학이 한국 사회학이라는 고유명사를 명실상부하게 불일 수 있도록 차별화하는 것이다. 이 차별화는 혼히들 독창적 이론을 개발함으로써 달성을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주로 사회학 이론이나 사회학사를 담당하는 사회학자들이 집담회나 발표를 통하여 ‘한국적’인 독창적 이론의 개발이나 정립에 대한 논의를 해오곤 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대학에서 고전 사회학 이론, 현대사회학 이론, 사회학사 등을 개설하고 그 가운데 한두 개는 전공필수로 설정하여 이론과 이론화의 중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이론 전공자에 의해 한국 사회현상에 대한 이론화 업적이 제대로 나온 것을 보기 힘들었다. 왜 그럴까?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다면 이제는 무언가 결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의문을 푸는 데는 맙스가 이야기하듯, 때로는 문제제기 자체를 부정하는 접근방법이 유용하다.

필자 생각으로는 우리 사회학계의 이론바 이론 전공자가 과연 이론화 전공자인지는 지극히 의심스럽다. 어쩌면 이론바 이론 전공자들이

1) 외국어를 남발함으로써 자기와 자기 학문을 신비화시키는 사대주의자들은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소장 김은전 교수)의 서울대 교수 50여 명에 대한 조사에서 잘 나타났다. 그 유명한 서울대 교수들 중 70% 가량이 한 문장에서 최소한 1개 이상의 외국어나 외래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들은 ‘업스트랙티브하게’(추상적으로), ‘제너럴하게’(일반적으로), ‘이그젝트하게’(정확하게), ‘베리어블하게’(다양하게) 등 영어의 형용사에 ‘하게’를 붙여 우리말의 부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다. 생물학과의 한 교수는 ‘색맹’을 ‘컬러 블라인드니스’로, ‘단순하다’를 ‘심플하다’로, ‘파악하다’를 ‘캐치하다’로 표현하는 등 1천 자 분량 강의에서 30여 회나 외국어 및 외래어를, 물리학과 어느 교수는 “와이드한 온도 레인지가 되죠(온도 범위가 넓어진다)”라고, 교육학과의 한 교수는 “아주 프랙티컬하고 리얼한 세팅 속에서 문제를 다루는 연습을 한다.”고……. 남한 최고의 명문이라는 국립 서울대학교라는 곳에서 이러한 자아상실증 환자이고 우리말 오염의 주범인 교수들이 우글거리고 또 각광받고 권세를 누리는 풍토이니 자주적 학문의 생성·발전이 어찌 가능하겠는가?

이론화를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게 우리 사회학계의 현실인 것 같다. 이들은 대부분 흔히 외국의 고전사회학자나 ‘저명한’ 현대사회학자들의 저작을 소개하고, 비교하며, 재해석하는 것을 주된 과업으로 한다. 이러한 작업은 다분히 훈고학적으로 진행된다. 이들은 또한 외국고전이나 저명서들을 금과옥조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더 지나치면 교조주의에 빠진다.

이론이란 사회현상들과 연구자와의 끊임 없는 대화와 변증법적 관계 속에서 결맞은 인식론적·방법론적 틀이 선정·결합되어 인과적 설명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일반화될 때 정립되는 것이다. 이론은 결코 그 자체의 고유논리에 의해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회영역의 현실과 부딪칠 때 가능해지는 것이다. 아무리 고전을 읽고 외우고 신주처럼 모셔도 구체적 사회현실과 부딪치지 않고는 이론화란 불가능하다. 이론이 이렇게 현실을 파악하고 인과적으로 설명하는 것인데, 우리의 삶과 직결된 구체적 현실에 대한 고민보다는 고전과 저명서의 풀이와 이를 이용한 훈고에 관심을 갖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들에게 한국적 또는 독창적 이론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

역설적이게도 노동사회학이나 역사사회학 등 다른부분 전공자는 독창적 이론화에 대해서 이론바 이론 전공자와는 달리 신격화를 거절하고

있다. 그들은 실제 한국적 현실과 현상을 파악하고 인과적으로 설명하는 작업, 곧 독창적 이론화를 줄곧 해왔고 또 상당한 성과를 가졌다. 그런데도 왜 독창적 이론에 대한 신격화 현상이 다른 한쪽에서 진행되는 것일까? 혹시 이러한 인식이 오히려 독창적 한국 사회학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출발부터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염려스럽다. 19세기 사회사상가들이 만든 잘못된 신비화가 그 이후 학문 발전에 엄청난 해악을 끼쳤다고 지적하듯이, 이러한 이론화를 외면하는 이론 전공자들이 한국 사회학의 자리매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을 공유하고 이것이 이론과목 설정에도 반영되어야 할 것 같다.

이론에서 사회로 향하는 이론학습 교과목에서 사회적 현실로부터 이론으로 나아가는 실사구시적 이론화 교과목으로 탈바꿈을 해야 할 것 같다. ■

강정구/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메디슨)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한국산업사회학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좌절된 사회혁명』, 『북한의 사회』 등이 있고, “미국과 한국전쟁”, “이승만의 민족사적 평가”, “북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적 대응의 실체”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